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민주 전 대표, 미래 비전 발표

‘K이니셔티브’로 세계 선도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4대 비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영상으로 공식 선언한 후 11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4월 11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멈춰버린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앞선 나라들을 따라가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모방이 아닌 주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양적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K-Initiative)라는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한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주도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상을 향해 도전하는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며, “지금은 글로벌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며, “이제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는 첨단 과학과 AI 시대의 격변 속에서도 세계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국가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없는 길도 만들어 온 자신이 ‘위대한 국민의 도구’로서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해서 주목받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4대 비전으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외교 강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강국’, △K-컬처와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을 제시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에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10일, 대선 출마 영상을 공개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늘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진짜 대한민국’이 탄핵정국에 흔들려있는 국민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 완성하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선 출마 선언... 민주 당내 네번째 출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지는 것이다. 또 내란 반대 진영이 연합 정부를 꾸리는 ‘연정’ 구상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문(신문재인)·친노(친노무현)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13일 세종시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저는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각자의 꿈을 꺼내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비상계급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구축 △내란 반대 세력이 함께 모이는 빛의 연정 구성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 추진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 등 3대 축 중심 국가 투자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지치정부 구성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행정수도 이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점 추진 정책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는 세종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 제공)

내란 반대 세력 ‘빛의 연정’ 3대 축 중심 국가 투자 내걸어

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조항 명문화 △신행정수도법 등의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며 “이재명 전 대표와 지난번 면담을 했을 때도 이를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헌법 개정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더 결탁하는 방향이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서 이 전 대표가 말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저는 법을 통해 먼저 추진하고 헌법 개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는 세종시

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진보 진영 정책·선거 연대 필요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촛불연대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촛불연대의 힘을 국정 운영 연대에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100일의 대타협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한 것이다. 초기 빛의 연정에 참여한 민주 현정수호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연대를 만들어야 개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규칙이 ‘권리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잠정 결정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경선과 관련한 틀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다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스

“산불진화 임도 유무, 초기 진화 성패 갈라”

민주 이원택 의원, 산불진화 임도 예산 확충 시급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0일, 경북 지역을 비롯한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임도의 존재 여부가 진화 속도와 피해 면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산불진화 임도 예산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마을 안길을 통한 접근이 가능해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고, 피해면적은 65ha에 그쳤다. 반면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의 경우, 임도가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산불영향구역이 931ha까지 확대된 이

후에야 임도를 활용해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청이 발간한 ‘2023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이하, 백서)’에 따르면, 합천 산불 당시 일불 전 33대의 헬기를 투입하고도 진화율은 10%에 불과했지만, 일불 이후 임도를 통한 지상 진화작업으로 진화율은 92%까지 상승했다. 반면 하동 산불의 경우 38대의 헬기를 동원하고도 임도가 없어 지상 진화가 어려웠고, 진화율은 64%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경북 산불영향구역 내 임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임도를 경계로 한 저지선이 실제로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도가 단순한 접근로 이상의 산불 대응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채용비리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외교부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채용비리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 구제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윤석열 파면 1주일... 한반도 평화, 다시 전략을 묻다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윤석열 파면 이후 1주일, 국회와 시민사회가 모여 한반도 평화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사천)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김대중도서관에서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YMCA, 자주통일 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등과 공동 주최했으며, △북한의 2국가 체제 선언 대응 △트럼프 2.0 정부의 한반도 정



책 △동북아 집단안보 구상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정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이 외교의 추종자가 아닌 설

의 교훈 등을 언급하며 외교 전략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중·한러 외교 정상화 △남북 간 선제적 신뢰 회복 △김대중 정부의 ‘4선 원칙’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정 △북미·북일 수교 환경 조성 △동북아 다자협력 재가동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계엄령, 트럼프 관세, AI 기술력, 지정화 변화 등 4대 폭풍이 한반도를 덮었다”며 “지금이야말로 지혜를 모아 평화의 구조를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책무 명확하게

민주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지난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경북 대형산불 이전부터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농업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남원시의회 임사회 개최

내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제272회 임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1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자치도 “전북사랑도민증 사업 본격 추진... 고향사랑기부 연계”

이번주 도정 주요 일정 발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국 유일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전북특별자치도청 김철태 대변인(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14~18일 전북자치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정 주요 사업과 일정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가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정의 각종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주간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우선 14일에는 ‘K-수직성장’ 공모사업 선정 소식과 함께,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전해져 건설 자재공제조합 전북지부가 피해복구성금 5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의 푸드테크 및 대체 단백질 육성 MOU 체결, 신재생 분산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계획 수립 착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 등이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김제에 위치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가 전국 유일의 농림부 주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농촌사회 활력과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쾌거라며 보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17일에는 정읍에서 ‘청경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며, 벤치마킹

보고회가 이어진다. 이어 18일에는 김제에서 (주)석경AT 준공식이 개최된다. 총 122억원의 투자를 통해 15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지며, 전북 첨단소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급·국별 비전 선포 및 중장기 계획 추진과 관련해 오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실질적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북사랑도민증(전북프렌즈)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된 정책으로, 타지에 거주 중인 전북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청 및 출연기관,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널리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이번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